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본격화

시, 내년 6월까지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 토지·지장물 보상 추진

지은 지 약 50년 된 전주교도소를 현 부지 뒤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는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가 지난 2015년 3월 20일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한 뒤 법무부와 주민 간 거주민의 이주대책 협의가 장기화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권고와 이주민들의 협조로 이주 및 생계대책이 수립되면서 보상 절차가 가능해졌다.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법무부이지만,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 지원은 전주시가 맡는다.

교도소 이전을 위한 보상 대상 물건은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편입토지 17만1552㎡로, 수목과 주택 등 지장

물 122건이다. 보상비는 총 406억 원 규모다.

시는 이주 및 생계대책으로 20가구 중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각각 14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3000평 규모의 생계대책 용지를 유상(대부)으로 제공하고, 공동 수익사업 시설도 지원한다.

시는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난 3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했다. 내년 6월까지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도소 시설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문화재생 공간, 평화1972' 자문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분기별 자

문회의를 통해 문화·예술·휴식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가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1972년 지어진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 도시화로 이전 논의가 진행돼왔다. 새로운 교도소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국비 1500억 원이 투입돼 현 교도소 부지보다 8만 4543㎡이 늘어난 19만5000㎡ 부지에 수용인원 1500명 규모의 신축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전주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 교도소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 주민들과 적극 협력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점검·정비

연말까지 366개 중 100개 대상

전주시가 등산로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국가지점번호판 366개 중 100개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등 기관별로 각각 사용하던 위치표시 체계를 지난 2013년부터 통일해 지난·범죄·응급의료 등 긴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안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낙서, 파손 등 훼손된 번호판은 정비하고, 표기된 지점번호가 현지 위치 지점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점번호판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시는 나머지 266개의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서도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시민들의 조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매년 국가지점번호가 필요한 구역을 조사·설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효천지구 금요 직거래 장터' 7월 2일까지 운영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효천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삼천동2가 762-1)에서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열고 있는 '효천지구 금요 직거래 장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과 18일 진행된 직거래 장터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방문해 매출 1200여 만 원을 달성하는 실적을 올렸다.

센터는 25일과 다음 달 2일 두 차례 더 이곳에서 직거래 장터를 연다. 당일 수확된 신선한 농산물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3만 원 이상 구매한 경우 농산물 등 사은품이 증정된다.

센터는 향후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점을 개장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효천지구에 거주 중인 주부 김영희(34)씨는 "효천지구에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직매장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금요일장터가 열려서 매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장터

를 통해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생산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니 더욱 믿음이 간다"고 밝혔다.

이영애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의 생산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효천지구 내 전주푸드 신규매장 개장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을 많이 구매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서 전주 관광명소 알린다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려... 여행지·체험 프로그램 등 홍보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덕진공원 등 전주의 관광명소 홍보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1년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 홍보활동을 벌인다. (주)코트파가 주최하는 이번 국제관광박람회는 40여 개 국가, 300여 기관·업체가 참가해 4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박람회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잠재적인 관광객과 여행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등 주요 여행지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B2B 상담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또 키오스크를 통해 전주의 주요 특산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와 함께 관광거점도시 전주 BI인 'YOUR TASTE JEONJU'를 활용한 굿즈를 선보이게 되며, 지역 관광업계 상생 도모를 위한 관광호텔 등 관광업체 마케팅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여름휴가 키워드를 'TASTE'로 정해 '여름휴가 전주여행'

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TASTE'는 T(Take a photo, 예쁜사진 찍어볼까), A(Activity, 한바탕 놀아볼까), S(Stress Relief, 휴식시간 가져볼까), T(Take a walk,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해 볼까), E(EAT, 맛집 투어 해볼까)로 정해졌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간 전주가 가지고 있던 문화·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MZ세대 등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 전국화 방안 모색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현장 방문해 추진상황 공유

정부가 전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평화동 주민활동공간 '온평' (덕적골3길 56) 등 통합돌봄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박주중 통합돌봄 민간지원단 상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과 통합돌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평화동 주민활동공간 '온평' 등 통합돌봄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박주중 통합돌봄 민간지원단 상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과 통합돌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양성일 제1차관의 이번 방문은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등 통합돌봄 모형을 구축 중인 전주시의 사업모형을 살펴보고 전 국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양성일 제1차관은 평화1동 통합돌봄 대상자 가구를 직접 찾아 서비스 연계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평화동 온평을 방문했다.

양 제1차관은 평화사회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통합돌봄 민간지원단과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의료 안전망 등 민간 협력기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전주시의 사업 추진경과와 사업효과, 건의사항이 공유됐으며, 향후 통합돌봄 사업 추진방향과 전국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전주시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결과와 건강-의료 안전망을 통해 월 평균 115만 원의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1만7500원을 절감하고, 전문성 있는 은퇴인력을 활용한 통합돌봄 서포터즈를 운영 하는 등 전주형 혁신 사례들이 높

게 평가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완산구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늘린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시는 내년부터는 아동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윤상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해 나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업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전주시의 우수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총동원해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주형 통합돌봄 독자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